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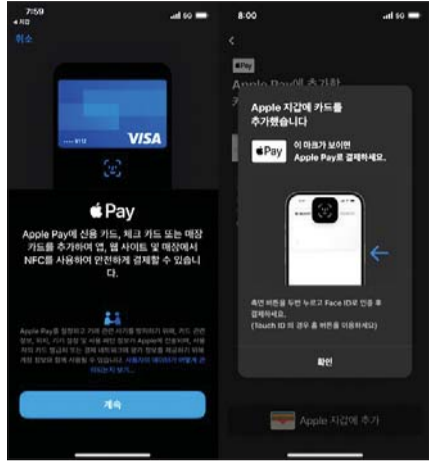
서비스 첫날, 기다렸던 만큼 '흥행'... 결제 불가 등 오류도

애플페이 국내 상륙

오전에만 17만 명 등록... 인기몰이 이용자 폭주로 결제 안 돼 이슈
아이폰6S 이후 제품 사용 가능
아직 현대카드만 제휴 맺은 상태
애플 "암호화 거쳐 보안 자신 있다"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된 애플페이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손진영 기자



아이폰에 현대카드를 등록하고 있는 모습. /허정윤 기자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다. 애플페이는 사용 첫날인 21일 오전에만 17만 명이 카드를 등록하며 인기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몰리면서 일부 가맹점에서는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히 벌어졌다.

애플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애플페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애플페이는 애플이 제조한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로 애플 자체 애플리케이션인 '지갑'에 현대카드를 등록하면 즉시 사

용 가능하다.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를 설치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애플 기기로는, iOS 16이 설치된 아이폰6S와 워치OS8이 설치된 애플워치 시리즈3 이후 모든 제품이다. 애플페이 카드 등록은 별도 운영체제 업데이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애플이 1차적으로 제휴를 맺은 카드는 현대카드다. 현대카드가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상태지만 다른

카드사들의 참여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4일 업데이트된 아이폰용 현대카드 앱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애플의 '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앱을 불러와 사용 등록이 가능하다.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휴 카드를 등록한 애플 기기를 NFC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된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이날 "더

많은 분이 간편한 결제 방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플페이 상륙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애플, 간편 결제 보안에 "자신 있다"
던킨 올비 애플페이 인터내셔널 총괄은 애플의 보안 기술을 자신하며 "카드 번호는 애플 서버는 물론 개인 단말기에조차 저장되지 않는다"며 "카드 번호가 아닌 고유의 기기 계정 번호(DAN)를 생성한 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단말기 내부 '시큐어 엘리먼트(Secure Element)' 칩에 안전하게 저장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칩은 업계 표준 인증을 받은 보안 칩이며, 결제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던킨 올비 총괄은 "아이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나의 찾기'를 통해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를 재빠르게 잠금·중단 처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애플페이 첫날 '흥행'... 하지만 결제 오류 빈번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결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카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배달 앱, 카페, 편의점 등 일부 애플페이 사용 가맹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예상보다 더 많은 고객들의 애플페이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고객들이 애플페이 결제 시 불편함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용자 몰림 현상으로 파악하고 조치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현대카드 측은 '서버 오류 문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애플페이는 사용할 수 없다. 교통카드 결제 단말기는 NFC 기반이지만 애플페이가 전송하는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따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단말기 교체가 필요하다. 애플페이가 교통카드 역할을 하려면 티머니·캐시비 같은 교통카드 회사가 별도로 애플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 가맹점 기준으로 50% 이상에서 쓸 수 있다"며 "사용처 확대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소상공인도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한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연 10만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에너지 비용 절감 기술 보급 예정

소상공인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온라인에 특화된 'E-커머스 소상공인'을 연간 10만명씩 양성한다. 준비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매년 500명씩 육성한다. 2025년까지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장을 5만개 보급한다.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곳, 백년소공인 1150곳을 추가로 발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여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근의 전기·가스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른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하던 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해 적용한다.

분할납부 시행시기는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다.

중기부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

증해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E-커머스 소상공인에겐 온라인판매 교육, 상품 개선, 휴소핑 O2O 플랫폼 진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도 추가로 구축한다.

상생형 스마트상점은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것 외에 선도기업이 30%, 그리고 소상공인은 20% 자부담하는 구조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에도 올해부터 매년 '강한 소상공인'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 25곳도 육성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주문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홍보도 수월

한진 앱 '디지털 이지오더'로 편리

㈜한진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지원 플랫폼 앱(App)인 '디지털 이지오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고 있다.

21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출시한 디지털 이지오더는 상품 등록부터 주문, 결제, 배송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앱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업무 편의성

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비, 주문 수수료, 광고비를 없애 판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관리 외에도 홍보, 마케팅 등 더 수월하게 매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가 단골 고객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디지털 명함을 보낼 수 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가게 전용 QR코드를 스캔해 매장 상품 정보를 확인 후 상품을 구매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환경부로 총 37개 환경성적표지 인증 보유

유진기업 친환경 경영 강화 나서

유진기업이 친환경 경영 강화에 나섰다. 21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13개 규격의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산

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단계 탄소발자국과 2단계 저탄소제품으로 나뉘어 운영하며 3년 단위로 갱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인증으로 유진기업은 37개 규격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노동계, 이정식 '직권 남용' 고발...당분간 노정 '강대강' 대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 회계 자료 제출 요구
노조 "자주성 침해 행위 중단"



열어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양대 노총 등 점검 대상 노조 319곳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노조 319곳 중 73.1%(233곳)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정부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 대상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양대노총은 "제3자인 고용부가 비치

또는 보관 자료의 등사물(인쇄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 등의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고용부가 노조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며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노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노동계가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자 노동계는 고발로 맞대응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총 30개 제품 개발부터 무료 방송까지

공영홈쇼핑 지역 특산물 지원 사업

공영홈쇼핑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15개 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별 상품 육성을 위한 '전국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2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국 지

역 특화제품 판로지원'은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산업단지 사업화 제품, 지역 고유 특산물 등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 30개 제품을 선정해 1대 1 상품 코칭 등 상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TV 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